

일상적 공공철학하기 (3강)

주제: 좋은 공공활동에 대해 이해하기

1. 본문 p. 98의 공공활동가와 사회디자이너는 어떤 사람을 의미하는가? 아래 글을 통해 어떤 생각과 실천을 하는 것이 필요한지 생각해 보자.

나는 늘 내 명함에 소셜 디자이너(Social Designer)라고 써 넣고 다닌다. '소셜 디자이너'가 새로운 하나의 직업이 된 것이다. 아직 이런 직업을 본 적이 없으니 세계 최초의 직업이 아닐까 싶다. 이것을 보고 디자인협회나 디자인회사에서 나를 강사로 초청을 한다. 동종이나 유사업종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인테리어나 패션을 디자인 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사회를 디자인 하는 사람이다. 어떻게 하면 우리 사회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을까를 밤이나 낮이나 고민한다. 어떻게 하면 좀 더 인간적이고 민주적이고 효율적이고 합리적이고 상식적일지를 생각한다. 외국의 길거리를 보고서도, 누구를 만나 이야기를 들을 때도, 택시를 탈 때도, 밤잠을 잘 때도 나는 그것만을 생각한다.

2. 좋은 공공활동을 하는 여러 가지 원칙(pp.108~110 참조)중 여러분이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지 아래 글과 관련하여 생각해 보자.

개성공단 죽이기 / 김종철

남북 화해와 경협을 상징한 개성공단이 고사 위기에 놓였다. 북한은 12월1일부터 경협 사무소를 폐쇄하고 남쪽의 상주인원을 절반으로 줄이는 조치가 “1차적”이라고 밝혔다. 상황에 따라 앞으로 2, 3차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미다. 추가 조치가 군사분계선 육로 통과 금지나 개성공단 전면 폐쇄가 될 것임은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다. 북한이 굳이 전면 폐쇄를 하지 않고 육로 통행만 막아도 입주업체는 제품의 납기일을 맞출 수 없게 돼 공장 문을 닫는 것을 피하기 어렵다.

눈앞의 상황이 밝히 보이는데도 이명박 정부는 여유만만이다. 청와대 관계자와 여당 대표, 대통령 측근 의원 등 권력 핵심부는 입을 맞춘 듯 “의연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얼마 전 “기다리는 것도 전략”이라고 말한 데 이어 그저께 삼부요인과 만난 자리에서 “대북 문제는 일관성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설패와 예상보다 맞아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얻을 게 뭔가. 우리 정부의 바람대로 “북한의 버르장머리”가 다소 고쳐진다고 하더라도 남는 게 뭔가. 그때는 이미 남북한 기싸움의 불모가 된 개성공단은 공중으로 사라진 뒤일 텐데 말이다. 그리고 북한의 버르장머리는 김영삼 정권도, 부시 정권도 못 고쳤다.

경제적인 가치는 그만두고라도 개성공단은 남북 평화와 공존을 약속하는 화해의 땅이다. 6·25 때 북한군의 남침로였으며 휴전 뒤에는 정예부대의 주둔지였던 곳이다. 그곳에는 총 든 군인 대신에 현재 3만3천여 북한 주민이 남쪽 기업에서 일하고 있다. 최종 완공될 때는 20여만명의 일터가 된다. 말 그대로 탱크를 녹여 보습을 만드는 평화의 현장이자. 통일의 관점에서 모든 평화의 시각에서 모든 소중하게 키워가야 할 한민족의 자산이다. (한겨레신문, 2008년 11월 29일자 칼럼)

3. 공공활동의 절차는 결과만큼이나 중요하다. 아래 사례를 보고, 어떤 절차가 중요한지 생각해 보자.

정주영은 두 아이의 아버지이다. 초등학교 1학년인 첫째 아들은 욕심이 많고, 경쟁심이 있는 반면 유치원을 다니는 둘째 딸은 아직 어린 나이인지 사람들 앞에서 수줍어하고

욕심이 많지 않다. 그래서 인지 케익 같은 맛있는 간식을 사오면 첫째 아들이 독식하기 일쑤였다. 그때마다 꿀밤을 먹이는 것도 싫고 아이를 먹는 것 가지고 주눅 들게도 싫었다. 그래서 하루는 케익을 사가지고는 두 아이에게 원칙을 제시하였다. 앞으로 케익을 아버지가 사오면 반드시 첫째가 자르고, 케익을 4조각으로 잘라 부모님과 동생, 자신에게 나누고, 자른 케익은 우선적으로 둘째가 먼저 집는다는 것이다. 그 일이 있는 후에 첫째는 케익을 자를 때마다 둘째를 고려하는 행동을 하게 되었다.

선출직 지방의원들은 의무적으로 홈페이지 개설을..

요즘 제가 지역에 일이 있어서 지방의회에서 일하고 계시는분에게 지역 현안에 대하여 말을전 할려고 해봤더니 전혀 연락할 길이 없더라구요. 또한 홈페이지도 전혀 없어서 주민과 지방의원간에 의사소통이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봐도 홈페이지가 있으면 지역주민들이 여러가지 민원을 넣을 것이고 또한 제대로 일을 안해도 욕먹을 일 없어서 좋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당선만 되면 놀아도 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것 같습니다. 주민들은 지역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데 지방의원들은 전혀 일을 하고 있지도 않고 만날 수도 없는 지금의 체계는 분명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4. 공공활동의 결정(decision)과 집행역시 중요하다. 여러분은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까?

사회적 합의과정에서의 결정(노사정 합의사례)

1997년이후 진행된 노사정 합의를 들어보자. 1997년 경제위기시 IMF의 다각적 압력(노동시장유연성 등)으로 인해 우리는 노사정 합의를 반 강제적으로 진행할 수밖에 상황(위기상황)이었고, 노사가 일정한 부분의 자신의 입장을 양보하며(정리해고제 즉시 도입+제벌개혁, 노동기본권 확대) 상호간의 설득과정을 거쳐 경제위기극복을 위한 조그나마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자신의 살을 깎으면서도 높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조기 경제극복) 진행한 합의 결정을 했다. 우리는 이를 시너지 결정과정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1997년 이후 노사정위원회의 결정은 우리에게 아쉬움을 자아냈다. 노, 사가 노조전임자 문제와 복수노조 유보의 각각의 핵심적이고 다른 사안에 대해 빅딜형으로 두 사안을 맞바꾸어 유보하는 결정을 한 것이다. 이러한 합의과정을 대체형 결정이라고 할 수 있다. 각자의 변화 노력없이 단지 합의형태만을 교환한 것을 표현한다.

불경기 힘겨운 재래시장. 빈민들이 살릴 수 있다면?

재래시장. 어려워 보였습니다. 한참 눈온다는 소식이 잦고, 물가까지 끝도 없이 올라서 민경제 어려움이 크다는 뉴스들이 연일 쏟아질 때, 저도 장을 보려고 시장에 갔더니 사람 발길은 뜸해보였고, 지방에서 트럭을 몰고 직접 상품을 판매하시는 농부들을 곧잘 만났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는 생보대상자를 지원하는 방안으로 쌀지급이라든지 전기료나 전화세같은 세금혜택, 장학금혜택이나 방과 후 학습지원같은 것도 모두 훌륭한 대안이겠지만, 여기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재래시장 상품권을 지급해주는 것은 어떨까요?

식민지근대화론자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혼쫓<교과서포럼 역사바로세우기>(다음기사검색)

28일 서울교육청의 고교 현대사 특강에서는 학계 일각으로부터 `식민지근대화론'을 주창했다고 비판받는 안병직 서울대 명예교수가 위안부 할머니들의 반발에 부딪혔다. 일본의 식민지화(化)로 조선의 근대화, 문명화에 도움이 됐다는 주장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안 교수의 강연이 열린 서대문구 인창고를 위안부 할머니들이 항의방문한 것. 김원옥(81), 이용수(80) 할머니 등은 "안 씨는 위안부가 강제로 끌려간 증거가 없고 식민지가 한국의 근대화에 도움을 줬다는 얘기를 주도하는 사람"이라며 "(그런 사람이) 고교생들에게 그런 걸 못 가르치도록 `산증인'으로서 강단에 함께 서려고 왔다"고 말했다.